

SNS를 통한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데스크톱 및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 효과 비교*

이원태(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차재권(동의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핵심적인 연구문제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SNS 정책참여가 기존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중심의 SNS 정책참여에 비해 정책참여의 양과 질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이 SNS를 통한 정책참여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하고 정책참여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물론 기존 정책의제설정과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정책참여의 패턴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라는 전통적으로 행정관료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책 결정 및 집행 영역까지 확장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들에 대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 기초적인 통계분석기법들을 활용하여 스마트미디어 활용에 따른 SNS 이용 패턴 및 정책참여에의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스마트미디어 시대 SNS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SNS 정책참여자들은 스마트미디어기기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정책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인식능력을 갖고 있으며, 비교적 활발하게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정책의제 가운데 사회적 정의나 형평과 관계되는 재분배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참여 경험자의 만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정책과정의 핵심단계라 할 수 있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정책참여 행위자로서 느끼는 정책효능감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마트미디어, 온라인 정책참여, 정책과정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 2013AA040).”
“이 연구는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NRF-2012-S1A3A-2033769).”

** 주저자

*** 교신저자

1. 들어가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동성을 갖춘 스마트미디어가 SNS를 즐겨 쓰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수집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중성과 보편성을 훨씬 강화해 주었기 때문이다. 각종 스마트미디어 기기로 무장한 ‘영리한 군중(smart mobs)’들은 SNS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실시간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선거와 같은 정치과정은 물론 정책과정 전반에도 보다 쉽고 빈번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NS는 스마트폰 확산을 계기로 위치기반 SNS, 소셜쇼핑, 소셜게임, 소셜TV 등 다양한 서비스 및 산업과 융합하는 인프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SNS는 최근 선거캠페인, 사회운동, 여론형성 등의 정치사회적 과정에서 중요한 매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SNS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SNS 이용자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정부가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해오던 정보가 양방향성을 갖게 됨으로써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이 증대되는 등 정책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미디어가 주도하는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SNS의 이용 증대가 정책이슈의 확산 및 정책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수요를 반영하듯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나 스마트미디어 확산에 따른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스마트미디어 이용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

실이다(심미선·김은미 2012, 2). 하지만 스마트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계속해서 커져 가고 있는데 반해 스마트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정치과정이나 정책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스마트미디어 관련 소비자 이용행태 분석과 같은 기초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스마트폰의 이용 여부나 간단한 이용행태 정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스마트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¹⁾

특히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으로 이동성과 실시간성이 보강된 SNS 이용자들의 정치참여 및 정책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황주성·이재현(2011)의 연구처럼 스마트폰 사용자 그룹과 기존 일반 휴대폰(피쳐폰, feature phone) 사용자 그룹의 미디어 이용패턴을 비교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있긴 하지만 공공생활에서의 행동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SNS의 시민정책참여에 대한 영향력과 같은 관련 분야의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일반화되긴 했지만 도입기간이 비교적 짧은데 있다. 아이폰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2009년의 일로 불과 6년이 채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스마트미디어 이용이 공공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에 미친 영향까지 연구의

1) 스마트미디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스마트미디어의 이용 동기와 미디어 채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왔다. 이용 동기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권영동(2010), 김홍규·오세정(2010), 양일영·이수영(2011) 등을 들 수 있겠고 채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로는 손승혜 외(2010), 이용일(2010) 등의 연구를 들 수 있겠다. 소셜 미디어의 이용 행태 및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희경·안주아(2014), 김형지 외(2014) 등의 연구를 들 수 있겠다.

외연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SNS를 활용한 시민정책참여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미디어의 발달로 SNS의 적극적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의 SNS를 통한 정책과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정책참여자의 참여에 따른 만족도와 정책공급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핵심적인 연구문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SNS 정책참여가 기존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중심의 SNS 정책참여에 비해 정책참여의 양과 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이 SNS를 통한 정책참여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참여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물론 기존 정책의제설정과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정책참여의 패턴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라는 전통적인 행정관료 중심의 폐쇄적 영역까지 확장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러한 연구문제의 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등 기초적인 통계분석기법들을 활용하여 스마트미디어 활용에 따른 SNS 이용 패턴 및 정책참여에의 영향을 실증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데스크톱 이용자와 스마트미디어 이용자로 서로 구분되는 두 개의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SNS 정책참여에 따른 전체적인 만족

도와 함께 정책공급자와의 상호작용의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과정 참여에 따른 만족감과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밝혀낼 것이다. 끝으로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서 스마트미디어 시대 SNS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의 결론을 대신할 것이다.

2. 온라인 정책참여에 관한 기존문헌 연구

1) 스마트 미디어 확산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 됨에 따라 스마트폰의 활용이 인터넷과 SNS 등 다른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데스크톱 컴퓨터 활용 패턴의 변화를 연구한 Karlson, et al.(2009)의 연구는 스마트폰의 높은 휴대성이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스마트폰 자체가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전달 기능을 넘어 데스크톱 컴퓨터를 대체하여 업무영역에로까지 그 사용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상호작용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atthews, et al.(2009) 역시 비슷한 결론을 얻었는데, 21명의 스마트폰 신규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조사에서 스마트폰은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의 보완재로 기능할 뿐 결코 대체재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인터넷 활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Ling & Sunsoy(2009)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아이폰이라는 특정 스마트폰 기기가 일반 휴대전화나 다른 스마트폰 기기에 비해 인터넷 접속과 다운로드 횟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발견했다(심미선·김은미 2011, 21 재인용).

최근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인터넷 및 SNS 이용 패턴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0년 7월부터 매 반기마다 실시해온 ‘스마트폰 이용행태 조사’가 있다. 매년 2번씩 지금까지 총 5번에 걸쳐 실시된 조사는 스마트폰의 이용률과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행태를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사의 경우 2010년 7월 실시된 1차 조사에서부터 매 번의 조사시점마다 조사항목들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 특정한 스마트폰 이용행태 항목에 대해 일정한 증감 패턴을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0)의 ‘미디어 이용과 효과 조사’ 역시 스마트폰 이용이 인터넷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심미선·김은미(2011)의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는 기존 연구가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존 대중매체들에 대한 스마트미디어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각각 구분된 스마트미디어 기기로서 종이신문, TV, 노트북, 데스크톱 등 기존 미디어 기기의 사용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모두 기존 미디어 기기의 사용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스마트폰보다 태블릿 PC가 종이신문, 노트북 등 기존 미디어의 이용시간을 더 많이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의 개인적인 대화 시간까지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심미선·김은미(2011)의 연구는 스마트미디어 기기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에도 기존 대중매체의 활용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마트미디어 이용자와 비이용

자 간 SNS 이용 패턴은 매우 두드러진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마트미디어 비이용자 중 SNS 이용자는 15.3%인데 반해 스마트미디어 이용자 중 SNS 이용자는 무려 52.6%에 달한다. 이는 스마트미디어 기기의 활용 여부가 SNS의 이용 여부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미디어의 이용 여부가 SNS의 이용 정도나 이용빈도, 그리고 SNS 교류대상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SNS가 여전히 친밀한 대인관계의 보완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스마트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구성과들은 주로 스마트폰의 기술적 특성이나 미디어 이용 행태에 관한 영향과 관계된 연구들로서 스마트미디어 사용자의 정치사회적인 공적 생활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스마트미디어의 정치·사회적 기능과는 무관한 기술적이거나 심리적인 부분의 영향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정치참여나 정책참여와는 거리가 있다. SNS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목적은 사이버 공간에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인맥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룬 가운데(Lampe, Ellison & Steinfield 2006, 2008), 자기표현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확인을 개인적인 SNS 이용동기로 보는 연구들도 있다(Mehdizadeh 2010; Gonzeles & Hancock 2011).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이라는 동기 요소 외에 금희조·조재호(2010)의 연구처럼 SNS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SNS 이용동기의 사회적 맥락을 밝히려 한 연구도 있다(금희조 2010; 최영·박성현 2011).

금희조·조재호(2010)의 연구는 이런 점에서 스마트미디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들은 스마트폰 채택 및 이용과 관련한 디

지털 격차 및 커뮤니케이션 격차 현상을 분석하면서 그러한 스마트미디어 채택 여부의 차이가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에도 기존 인터넷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과 수입이 높을수록 이용 경향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이는 정치정보의 습득 및 커뮤니케이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디지털 격차와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격차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폰 이용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의 습득과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함으로써 정치참여의 격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금희조·조재호(2010)의 연구에서 정치참여의 격차를 가져오게 하는 매개변수는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SNS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그들은 SNS를 포함한 소셜미디어를 정치적 의사소통을 위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를 중심으로 스마트미디어의 정치참여 효과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내린 연구 결론을 일반적인 ‘이용과 충족’을 목적으로 한 SNS 사용으로까지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SNS 등장 초기의 국내외 연구들은 금희조·조재호(2010)의 경우와는 달리 ‘이용과 충족’이라는 매우 일반적인 이용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SNS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다(Java et al. 2007; Joinson 2008; Livingstone 2008; Urista, Dong & Day 2009; 심홍진·황유선 2010; 최영·박성현 2011).

2)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SNS 정책참여에 대한 선행 연구

2002년 라인골드(Howard Rheingold)가 그의 저서 『참여군중(Smart Mobs)』에서 예견한 바와 같이 인터넷과 이동통신으로 무장한 참여군

중은 이제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 및 통신 기술의 고도화와 방송과의 기술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참여군중은 각종 디지털 장비로 무장한 채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다수의 대중과 실시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유목민으로 진화한다. 특히 웹2.0 기술이 발달하고 디지털 융합환경이 조성되면서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에 힘입어 웹2.0 서비스의 실시간성과 이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SNS를 포함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2010년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인구의 40%, 청년층의 72%, 10대의 73%가 SNS를 활용하고 있으며, 트위터 사용자들이 매일 트윗하는 메시지 수가 35백만건에 이를 정도로 SNS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Pirolli et al. 2010). 이러한 경향에 힘입어 네트워크화된 개인의 온라인 시민참여 또한 함께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군중이 되었든 아니면 네트워크화된 디지털 유목민이 되었든 발달된 인터넷 환경 속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치 및 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의 욕구는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그러한 욕구를 실현할 기술적 조건 또한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모바일화를 통해 더욱 성숙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학계 및 관련 산업계의 관심 또한 증폭되어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가 주요한 연구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s)의 발달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민주주의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가 정확히 어떠한 형태의 참여인지에 대해 통일된 시각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들마다 그들이 바탕을 두고 있는 학문분야에 따라 시민참여를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접근해 왔다.

사회학자들의 경우 시민참여를 보다 광범한 맥락에서의 사회참여로 이해하여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화가 어떻게 시민의 사회참여를 다양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정치학자들의 경우에는 시민참여를 정치참여에 국한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해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시민의 정당활동이나 선거참여 등 정치과정 일반에 어떤 민주적 강화를 가져오게 되는 지에 주로 관심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반면 행정학자들의 경우 전자정부나 e-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참여를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로 구체화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학과 정치학에서는 인터넷 발달에 따른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정치과정과 시민사회운동의 맥락에서 전자민주주의(혹은 사이버민주주의, 원격민주주의)의 거대 담론과 연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행정학이나 정책학에서는 전자정부 혹은 e-거버넌스의 문제의식과 연결하여 보다 미시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Heeks 1999; Sadri and Mlikota 2002; Riley 2003; Kakabadse, Lan et al. 2003 등).

이와 같이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른 시각 차이로 인해 인터넷 기술의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접근 방법이 확연히 구분되어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며, 두 접근 방법 간에는 매우 제한적인 상호작용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거대 담론만을 주로 다루던 정치학과 사회학 영역의 연구들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한 시민참여가 구체적으로 정부의 정책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조화순·송경재 2004; 김용철·윤성이 2005; 윤성이 2006; 이원태 외 2008; 차재권 2009; 윤성이 외 2010; 류석진 외 2011), 다른 한편으로 전자정부의 효율성과 같은 미시적·도구적 차원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던 행정학·정책학의 영역에서도 전자정부에의 시민참여의 문제를 e-거버넌스의 문

제의식과 연계하면서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인터넷의 정치사회적 효과를 바라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김종호·김강민 2004; 고영삼 2006; 이재성 2006; 하혜영·이재성 2008; 문신용 2009). 정책과정의 시민참여에 대한 인터넷 기술의 영향을 다루는 최근의 연구들 중에는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이 만나는 접점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연구들도 있다(박준수·서진완 2008; 서진완·박준수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부기관 홈페이지나 콘텐츠가 기술적 채널을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주목하거나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평가에 주로 집중되어 있어(윤주명 2001; 김종호·김강민 2004; 임준형 2006)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외에도 정부조직, 기관, 시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통합적인 컨버전스를 적용,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연구성과가 제시되고 있다(이원태 2004 ; 정중호·채송화 2006 ; 정영철·박종안 2007 ; 석호익 2008 ; 강원택 2009 ; 윤성이·김용철 2009).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전체적인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시민참여가 나타나며 그러한 참여의 결과, 정책과정의 각 단계별 특성이 어떻게 변모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즉,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전통적인 정책과정을 설명하는 자기발견적(heuristic)인 모형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모형들이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 상황에서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한 논의가 추상적 수준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반성이나 하듯 최근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로의 변화 속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시민의 정책참여를

보다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기존 인터넷 정책참여 연구의 초점이 참여주체로서의 ‘시민’에 두어졌다면, 최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연구는 ‘정책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원태·차재권·홍순식(2008)은 시민들의 웹2.0 이용이 공공영역에서의 의사결정 방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웹2.0을 활용한 의사결정 참여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인 데다가 의제설정단계에 치중한 참여특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윤성이·김용철(2009)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적합한 정부-시민관계, 즉 정책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려는 연구로 정치구조, 시민, 제도가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들은 효율성과 민주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정책결정으로서 유동적(fluid)이고 상황적(contingent)인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윤성이·송경재(2011)의 연구에서는 시민의 정책참여가 단층적이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라, 적용 층위와 이슈의 성격에 따라 달리 구성되는 복합적 방식임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융합 거버넌스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융합 거버넌스의 구체적 내용과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차재권·장우영(2010)의 연구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기술진화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의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의 한계에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시민 정책참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성과로 박준수와 서진완의 일련의 공동연구논문을 들 수 있는데(박준수·서진완 2008; 서진완·박준수 2010) 이들의 논문은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공동체가 어떻게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상세히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황성수(2011)의 최근 연구 또한 온라인 정책참여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그는 전자정부사이트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온라인 정책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울시의 ‘천만상상오아시스’를 사례로 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활발한 온라인 정책참여가 서울시의 정책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의 연구들은 여전히 사이버공동체라는 집합적 의미의 행위자를 분석단위로 함으로써 디지털 융합환경에서 보다 개인주의화된(즉, 디지털 유목민화되어 가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개인 행위자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정책참여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험분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국의 경우 OECD(2001)나 United Nations(2005)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e-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인터넷 정책참여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Sadri and Mlikota 2002; Riley 2003; Kakabadse, Lan et al. 2003; Stanley and Weare 2004 등) 최근에는 보다 발달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ogers W'O Okot-Uma 2004 ; Hardy and Williams 2008 ; Shin 2009). 특히 최근 몇 년간 IT 관련 각종 학회들이 의도적으로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시민의 정책참여 문제를 주요한 주제로 다루면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들 중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어 낸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Laanpere·Tammsaar·Sausa 2011; Kardara et. al. 2011; Faria 2010). 이들 외국의 연구성과들은 매우 다양한 사례연구를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

나라 온라인 공동체는 물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구성원으로서의 개별 행위자들까지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정책참여의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연구성과들과는 차별성을 보인다.

예컨대 Matheus et al.(2010)의 경우,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참여예산제(DPB: Digital Participatory Budgets) 대해 사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시민 정책참여에 인터넷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증진시키는 지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남미 지방도시들에서는 1990년 초반부터 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고 1990년 중반 이후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직접적인 인터넷 투표를 통해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시민투표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활발한 인터넷 토론을 통해 예산편성에 시민의 정책선호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융합시대의 정책과정 개방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Gigler(2011)의 경우, 볼리비아 지방정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ICTs가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를 어떻게 진작시키며, 로컬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가를 분석한 바 있고, Royo et. al.(2012)의 경우, 인터넷의 확산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어떻게 활발하게 만드는 지를 유럽 지방정부의 기후변화(climate change) 정책수행과정을 사례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들의 분석 결과, 인터넷이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문화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비교적 강력한 인터넷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정책참여가 제한적인 중국의 경우에도 인터넷의 역할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의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국학자들의 학술회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Zhang(2011)은 인터넷 규제가 심한 중국에서도 인터넷을 매개로한 공공정책에의 시민참여가 정책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인터넷 매개의 시민 정책참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이성적인 정책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비이성적이고 비규범적인 인터넷 시민참여가 가능토록 인터넷 기반의 정책결정 채널을 보다 완벽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Hu·Zhou(2011)는 가상의 공적 영역과 네트워크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 시민참여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네트워크 시민참여가 네티즌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적 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토록 하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 의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3) 기존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

인터넷 시민 정책참여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운동, 정치참여, 민주주의, 거버넌스 등과 같은 거대담론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과정의 단계나 개별 정책 이슈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적인 효과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국내의 연구 경향과는 달리 해외 연구의 경우, 국내 연구가 지닌 거시적 담론과 미시적 담론 간의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극복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인터넷 시민 정책참여

에 관한 연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와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정부의 다양한 세부정책, 특히, 참여 원인과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전자정부로 서비스의 변화를 꾀하는 정부의 시도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효과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해 오고 있지만(조희정 2011; 임광현 2008) 많은 연구들이 여전히 전자정부의 발전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공급자 중심의 평가방법에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시민이 다양한 정책과정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중심으로 정책참여의 정도를 측정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급되는 정부정책의 시민지향성만을 주로 측정함으로써 정책참여의 의미를 훼손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기존연구들은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을 Huntington and Nelson(1976)이나 Verba(1967)의 정의를 빌어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시민의 행위로 정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정의되는 시민참여를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에서 시민참여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보다 선거나 정당활동 등과 같은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로 주로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셋째, 온라인 정책참여를 온라인 정치참여에 종속된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참여와 정책참여는 엄연히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의 대부분이 정책참여와 정치참여를 혼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참여를 정치참여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인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이버공동체의 정책참여과정에서의 역할을 연구한 박준수와 서진완의 공동 연구에서도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치참여와 정책참여 간의 차별

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사이버공동체의 단순한 정치적 항의활동마저도 쉽게 정책참여의 일환으로 치부해버리는 오류를 그들의 연구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박준수·서진완 2008).

넷째, 온라인 시민참여를 주로 시민의 관여 정도나 참여행태, 토론 여부, 의사소통의 수준 등 매우 형식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구분하고 있어 그렇게 구분된 유형들이 전자정부의 목표 실현 정도를 단계별·수준별로 여하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예컨대 조희정(2011)의 경우 시민참여 형태와 시민의 관여도만을 기준으로 전자정부 G4C서비스에서 현실화된 정보공개, 민원해결, 정책제안 유형을 단계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간에 어떤 양적 혹은 질적인 시민 참여나 관여의 차이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온라인을 통한 시민 정책참여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달라진 정책 환경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들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웹 기술의 발전단계에 따라 정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그러한 환경 속에 존재하는 정책행위자(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역시)들의 존재양식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박준수와 서진완의 시민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정책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의 연구에서 정책참여의 행위자는 여전히 집합적 의미에서의 사이버공동체로만 규정되고 있다. 디지털 융합 환경의 조성과 그에 따른 SNS를 중심으로 한 소셜 미디어의 발달과 모바일화는 정책 환경과 정책행위자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을 뛰어 넘는 엄청난 상호성과 동시성을 가져다주었고 그러한 환경에서 정책행위자들은 집단적 성격보다는 보다 개인주의화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의 연구는 간과하고 있다.

3.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SNS 이용과 정책참여 효과 분석

1) 인터넷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될 자료는 2012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데스크톱 PC를 활용한 SNS 이용자 340명과 스마트폰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SNS 이용자 66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웹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조사의 결과이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파악한 주요 조사내용은 SNS 이용자의 인터넷 및 SNS 이용행태,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SNS 이용행태, SNS를 통한 정책참여 행태 및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시민 정책참여의 수준에 관한 것들이다.²⁾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표본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례수	백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534)	53.4
	여자	(466)	46.6
연령별	20대	(264)	26.4
	30대	(297)	29.7
	40대	(286)	28.6
	50대	(153)	15.3

2) 본 설문조사에 활용된 표본은 온라인 설문조사업체인 (주)엠브레인이 보유한 조사패널을 대상으로 2010년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 주민등록 통계인구 자료를 고려하여 지역,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으로 표집되었다.

지역별	서울	(212)	21.2
	경기/인천	(308)	30.8
	대전/충청	(99)	9.9
	광주/전라	(91)	9.1
	대구/경북	(99)	9.9
	부산/울산/경남	(154)	15.4
	강원/제주	(37)	3.7
직업별	농림어업	(4)	0.4
	자영업	(84)	8.4
	블루칼라	(112)	11.2
	화이트칼라	(513)	51.3
	가정주부	(111)	11.1
	학생	(144)	14.4
	기타/무직	(32)	3.2
최종학력별	중졸이하	(6)	0.6
	고졸	(202)	20.2
	대재이상	(792)	79.2
소득별	200만원 미만	(137)	13.7
	200~300만원 미만	(175)	17.5
	300~400만원 미만	(165)	16.5
	400~500만원 미만	(215)	21.5
	500만원 이상	(308)	30.8

2) 정책참여 관련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SNS를 통해 참여한 정책 과정이 어떤 이슈와 관련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경제/소비생활’이 6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국내사회’가 50.9%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정치/통일외교’(31.8%), ‘문화’(29.8%), ‘스포츠/연예’(1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

로는 30대(68%), 50대(68.6%), 대구/경북(67.7%) 거주자, 자영업(72.6%), 블루칼라(68.8%), 가정주부(72.1%) 층에서 ‘경제/소비생활’ 분야의 정책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정책과정과 관련된 정책 의제로는 ‘재분배 정책’이 48.9%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정책’(36.8%), ‘동원정책’(31.8%), ‘구성정책’(30.1%) 등의 순이다. 특히, 서울(52.4%) 거주자, 광주/전라(52.7%), 부산/울산/경남(55.2%) 거주자 층에서 ‘재분배 정책’에 관련된 정책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정 참여 만족도를 살펴보면, ‘정책결정 단계’에 참여한 응답자의 ‘만족’ 비율이 54.0%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의제 설정단계’와 ‘정책집행 단계’가 각 49.3%와, 44.9%로 그 뒤를 이었다. ‘정책평가 단계’에 참여한 경우의 ‘만족’ 비율이 21.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기관 모바일 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3개 이상’ 인지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2.85개의 모바일 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는 남자(39.5%), 40대(45.5%), 50대(45.9%), 서울(39.7%), 대구/경북(39.8%) 거주자, 화이트칼라(39.6%),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42.3%) 층에서 ‘3개 이상’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미디어에 설치한 정부/공공기관의 모바일 앱이 ‘1개’라는 응답자가 30.5%로 가장 많고, ‘설치하지 않음’ 응답자가 25.2%, ‘3개 이상’ 설치한 응답자는 22.9%, ‘2개’ 설치한 응답자는 21.4%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설치 개수는 1.89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36.8%), 가정주부(34.8%), 고졸(38.2%), 월평균 소득200만원 미만(42.9%) 층에서 ‘1개’를 설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기관 사이트 또는 SNS에 개진한 의견이 해당 기관에 의해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생각’이 61.0%로 높았고, ‘그저 그런 정도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은 26.0%,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것으로 생각’

은 13.0%로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편이다(5점 척도 2.39점³⁾). ‘그저 그런 정도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은 광주/전라 지역 SNS 이용기간 3년 이상(34.3%), 실용형 SNS 이용자(31.6%), SNS 정책참여 6개월에 한번 이상(35.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모두 이용하는 응답자(base=434명)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꼽은 비율이 37.1%로 ‘스마트 미디어 기기’(32.0%)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라는 의견은 50대(56.4%), 자영업(43.2%) 및 블루칼라(45.9%) 종사자, 고졸(45.5%) 학력층, 월소득 200만원 미만(40.4%)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꼽은 경우는 30대(40.2%), 대전/충청(36.4%), 광주/전라(39.5%) 거주자, 노트북(37.4%) 및 태블릿PC(37.3%)를 통한 SNS 이용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바일을 통한 SNS 참여자(base=660명)의 46.5%는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10명 중 3명 가량(29.7%)은 ‘정책결정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정책평가 단계’는 12.3%, ‘정책집행 단계’는 11.5%로 나타났다. 정책의제 설정 단계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은 광주/전라(51.7%) 및 대구/경북(50.8%) 거주자, 유튜브(51.0%) 이용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책결정 단계라는 응답은 30대(33.7%) 및 50대(34.1%), 서울(35.9%) 및 대전/충청

³⁾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했다’(1점)~‘그저 그런 정도로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다’(3점)~‘전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다’(5점)의 5점 척도로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짐

(34.4%) 거주자, 태블릿PC(35.2%) SNS 이용층, 고졸(34.4%)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의제 설정 단계에 참여한 응답자(base=269명)를 대상으로 상호작용이 신속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해 본 결과, 절반이상은 신속한 상호작용에 동의⁴⁾(56.5%)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명 중 1명(10.8%)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단계 참여자(base=176명)의 경우는 54.0%가 신속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15.3%의 응답자가 비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집행 단계(base=96명) 상호작용 신속성에 대해서는 46.9%가 동의하고 있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며, 11.5%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책평가 단계(base=264명) 경험자의 47.0%는 상호작용이 신속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22.3%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책단계별로 신속한 상호작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50% 내외로 긍정평가가 많은 편이다.

스마트 미디어 활용 정책 참여자 8명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이 활발한 단계를 조사한 결과, 정책의제 설정 단계를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50.0%(4명)로 절반이었으며, 정책집행 단계는 25.0%(2명), 정책평가 단계와 정책결정 단계를 꼽은 응답자가 각각 12.5%(1명)로 나타났다.

3) 주요 변수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1) SNS를 활용해 참여한 정책과정 단계의 교차분석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을 기준으로 정책과정 단계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정책의제설정 단계(44.4%), 정책결정단계(28.1%), 정책집행단계(15.0%)에서 여성에 비해 참여 비율이 높은 반

⁴⁾ 1부터 10까지의 단계 중 6이상을 선택한 경우는 '동의'로 간주하였다.

면, 여성의 경우에는 정책평가단계(43.6%)의 참여가 모든 정책과정의 단계 중 가장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남성(38.4%)에 비해 유일하게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43.9%)와 30대(39.1%)는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정책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40대(43.0%)와 50대(47.7%)는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정책참여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20-30세대와 40-50세대 간에 정책과정참여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연령 효과를 각 정책과정의 단계별로 살펴보면 정책의제설정단계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갈수록 참여 비율 또한 높아 가는 경의 상관관계가 확인되고 있으나 그 외 단계의 경우 특이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경우 정책평가단계보다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참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난 반면 그 외 지역들은 그 반대로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제주의 경우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참여 비율(18.9%)이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참여 비율(16.2%)보다 더 높아 다른 지역들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SNS 참여유형별로 살펴보면 데스크톱 SNS 사용자는 정책의제설정 단계(42.1% vs. 40.8%)와 정책평가단계(42.4% vs. 40.0%)에서 모바일 SNS 사용자보다 그 참여 비율이 높은 반면 모바일 SNS는 그와 반대로 정책결정단계(21.2% vs. 26.7%)와 정책집행단계(11.8% vs. 14.5%)에서 데스크톱 SNS 사용자보다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SNS 활용으로 증대된 이동성과 실시간성이 정책결정과 집행이라는 정책과정의 매우 중요한 단계로까지 시민참여를 끌어들이는 기술적 유인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가능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가정주부와 학생의 경우, 다른 직업들과 달리

정책의제설정단계보다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참여 비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직업들과 정책참여 패턴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로는 대재 이상 고학력층의 정책참여 빈도(792명)가 고졸 이하 저학력층의 정책참여 빈도(206명)보다 거의 4배 가깝게 많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학력차에 따른 정책참여의 정도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SNS를 통한 시민 정책참여에 학력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소득구간의 경우 정책의제설정단계보다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정책참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소득구간은 오히려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정책참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교적 유형과 관계재구축형은 정책의제>정책평가>정책결정>정책집행의 순으로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관심유도형은 정책결정단계, 실용형은 정책평가단계, 추종형은 정책결정단계의 참여 비율이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SNS 이용유형별로 정책참여의 패턴이 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SNS 정책참여빈도가 높을수록 각 정책단계에의 참여가 대체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참여과정에 활용되는 SNS의 종류에 따른 정책참여 단계별 분포를 살펴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톡, 유튜브 등 우리나라에서 널리 알려진 서비스유형들은 대부분 정책의제설정단계와 정책평가단계에의 참여 비율이 미투데이, 요즘 등과 같은 비교적 이용도가 낮은 서비스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참여에 활용한 SNS 서비스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페이스북 사용자의 경우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참여 비율(43.0%)이 정책의제설정단

계에서의 참여 비율(41.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나머지 SNS 서비스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싸이월드 이용자의 경우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결정 단계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투데이, 유튜브 사용자의 경우 정책의제설정단계에 참여한 비율이 나머지 SNS 서비스 사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념성향별로 정책과정의 각 단계별 참여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보수와 중도의 경우 정책의제설정단계보다는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참여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참여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이념성향의 차이에 따른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의 참여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호정당별로 정책과정의 각 단계별 참여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참여 비율이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참여 비율보다 조금 높게 나타난 반면 선진통일당, 통합진보당 및 기타 군소정당들의 경우에는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참여 비율이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참여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민주통합당과 무당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참여 비율이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참여 비율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고 진보신당의 경우에는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참여 비율이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의 참여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통합진보당 및 기타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정책참여가 정책의제설정단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양대 정당의 경쟁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의제설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소규모 정당들의 정치적 속성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2〉 SNS를 활용해 참여한 정책과정의 단계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

		사례 수	정책의제 설정 단계	정책평가 단계	정책결정 단계	정책집행 단계	모르겠다
전체		(1000)	41.2	40.8	24.8	13.6	0.4
성별	남자	(534)	44.4	38.4	28.1	15.0	0.2
	여자	(466)	37.6	43.6	21.0	12.0	0.6
연령별	20대	(264)	38.3	43.9	24.6	15.9	0.0
	30대	(297)	38.7	39.1	27.3	12.5	0.3
	40대	(286)	43.0	39.5	23.8	12.9	0.3
	50대	(153)	47.7	41.2	22.2	13.1	1.3
지역별	서울	(212)	42.0	42.5	26.4	14.2	0.5
	경기/인천	(308)	39.3	41.9	26.9	12.0	1.0
	대전/충청	(99)	46.5	38.4	24.2	13.1	0.0
	광주/전라	(91)	45.1	33.0	25.3	16.5	0.0
	대구/경북	(99)	41.4	44.4	21.2	13.1	0.0
	부산/울산/경남	(154)	40.3	39.6	22.7	13.6	0.0
	강원/제주	(37)	32.4	43.2	16.2	18.9	0.0
SNS참여유형	데스크톱 SNS	(340)	42.1	42.4	21.2	11.8	0.9
	모바일 SNS	(660)	40.8	40.0	26.7	14.5	0.2
직업별	농림어업	(4)	75.0	25.0	0.0	0.0	0.0
	자영업	(84)	42.9	35.7	25.0	14.3	1.2
	블루칼라	(112)	40.2	36.6	27.7	19.6	0.9
	화이트칼라	(513)	43.7	39.2	27.3	13.1	0.2
	가정주부	(111)	35.1	46.8	18.9	11.7	0.9
	학생	(144)	36.8	50.0	18.8	12.5	0.0
	기타/무직	(32)	37.5	34.4	25.0	12.5	0.0
최종학력별	중졸이하	(6)	66.7	0.0	16.7	16.7	0.0
	고졸	(202)	31.2	39.1	26.7	13.4	1.0
	대재이상	(792)	43.6	41.5	24.4	13.6	0.3
소득별	200만원 미만	(137)	28.5	35.0	32.1	14.6	0.7
	200~300만원 미만	(175)	42.9	37.7	22.9	15.4	0.0
	300~400만원 미만	(165)	35.2	43.6	23.0	13.3	0.6
	400~500만원 미만	(215)	47.4	38.1	20.9	14.0	0.5
	500만원 이상	(308)	44.8	45.5	26.3	12.0	0.3
SNS이용유형	사회적유형	(245)	46.5	33.5	29.4	13.5	0.4
	관심유도형	(42)	35.7	23.8	47.6	26.2	0.0

	추종형	(134)	27.6	30.6	34.3	20.1	0.0
	관계재구축형	(83)	41.0	34.9	31.3	22.9	0.0
	실용형	(496)	42.7	49.6	16.9	9.3	0.6
SNS정책참여 빈도	1년에 한번 미만	(392)	36.7	42.3	18.4	10.5	0.5
	6개월에 한 번 이상	(359)	42.6	39.8	26.2	16.4	0.3
	2~3개월에 1번 이상	(201)	46.3	40.3	32.8	14.4	0.5
	매달 한 번 이상	(48)	45.8	37.5	33.3	14.6	0.0
정책참여 SNS종류	페이스북	(493)	41.0	43.0	26.0	13.8	0.2
	트위터	(379)	42.5	41.2	28.5	15.3	0.3
	미투데이	(44)	50.0	27.3	45.5	27.3	0.0
	싸이월드	(117)	38.5	33.3	34.2	22.2	0.0
	키넥팅	(1)	100.0	100.0	100.0	0.0	0.0
	블로그	(187)	44.4	42.2	28.3	15.5	1.1
	요즘	(8)	62.5	0.0	12.5	25.0	0.0
	카카오톡	(245)	41.6	36.7	28.6	20.4	0.0
	유튜브	(62)	54.8	33.9	37.1	21.0	0.0
기타	(2)	50.0	50.0	0.0	0.0	0.0	
이념성향	보수	(185)	44.3	45.9	21.6	10.8	1.1
	중도	(265)	37.7	38.5	25.3	15.5	0.8
	진보	(550)	41.8	40.2	25.6	13.6	0.0
선호정당	새누리당	(214)	45.8	37.4	26.2	15.9	0.5
	민주통합당	(266)	40.2	43.6	25.9	15.0	0.0
	통합진보당	(43)	34.9	32.6	25.6	18.6	0.0
	선진통일당	(8)	62.5	25.0	25.0	12.5	0.0
	진보신당	(14)	28.6	64.3	14.3	14.3	0.0
	기타	(13)	46.2	7.7	38.5	30.8	0.0
	무당층	(442)	40.0	42.1	23.3	10.6	0.7

(2) SNS 활용 정책 참여 빈도

성별로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가 여성의 경우보다 더 자주 정책참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SNS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고 답한 남성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남성응답자의 37.3%인데 반해 여성은 41.4%에 달한다. 반대로 '2~3개월에 한 번 이상' SNS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

한다는 여성응답자는 18.7%인데 반해 남성응답자의 비율은 21.3%에 달한다.

연령별로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응답자의 47.7%가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SNS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40대의 33.6%, 50대의 34.6%만이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SNS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고연령대가 저연령대에 비해 오히려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의 빈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매달 한 번 이상’ SNS를 활용해 정책참여를 한다는 응답자의 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4.7%, 30대의 3.7%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40대의 5.6%, 50대의 6.5%가 그렇다고 답해 오히려 고연령대의 SNS 정책참여가 훨씬 활발함을 짐작케 한다. 비록 젊은 세대의 SNS 활용도가 높긴 하지만 활용 용도는 지극히 사적인 목적이 많은 반면 고연령대의 SNS 활용 용도는 공적인 목적이 많다는 사실과 함께 사회의 공공 이슈에 대해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의 정책참여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지역별로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강원/제주 지역에서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매달 한 번 이상’ SNS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해당지역들에서는 각각 3.9%와 2.7%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SNS 참여유형별로 살펴보면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데스크톱 SNS 사용자의 경우 41.2%인데 반해 모바일 SNS 사용자는 38.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달 한 번 이상’ SNS 정책참여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데스크톱 SNS 사용자의 경우 3.2%에 불과하지만 모바일 SNS 사용자는 5.6%에 달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모바일 SNS 사용자가 데스크톱 사용자에 비해 SNS를 통한 정책참여의 빈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 블루칼라, 학생의 경우 다른 직업들에 비해 ‘2-3개월에 한 번 이상’ 혹은 ‘매달 한 번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SNS를 통한 정책과정 참여가 더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중졸 이하인 경우 66.7%인데 반해 고졸 이하는 50.5%, 대재 이상은 36.1%로 연령대가 높아갈수록 그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와 반대로 ‘매일 한 번 이상’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중졸 이하인 경우 0.0%인데 반해 고졸 이하는 4.0%, 대재 이상은 5.1%로 학력이 높아갈수록 SNS 정책참여의 빈도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0만원 미만은 50.4%인데 반해 300~4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속한 응답자는 45.5%, 500만원 이상 고소득 응답자는 28.9%로 소득이 높아갈수록 정책참여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NS 이용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 한 번 미만’ SNS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SNS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5.0%인데 반해 3년 이상인 경우 32.4%에 불과한데 ‘2~3개월에 한 번 이상’ SNS를 통해 정책참여를 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SNS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의 비율은 13.7%인데 반해 SNS 이용기간이 3년 이상인 응답자의 비율은 23.0%에 달하고 있다. 이는 SNS 이용기간과

SNS 활용 정책 참여 빈도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SNS 이용유형별로 살펴보면 관계재구축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6개월에 한 번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재구축형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43.4%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2~3개월에 한 번 이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모든 이용유형들에서 가장 높은 25.3%를 기록했다.

정책과정 참여 단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정책의제설정단계(‘6개월 한 번 이상’ + ‘1년에 한 번 미만’ = 35.0%)와 정책평가단계(‘1년에 한 번 미만’ = 40.7%)의 참여 빈도가 정책결정단계(‘1년에 한 번 미만’ = 29.0%)와 정책집행단계(‘1년에 한 번 미만’ = 30.1%)의 참여 빈도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 SNS 정책참여가 정책결정이나 정책평가와 같이 정책과정의 핵심적인 단계에서는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정책참여시 활용하는 SNS 종류별로 살펴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블로그, 카카오톡, 유튜브와 같이 이용도가 높은 SNS 서비스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나머지 서비스(미투데이, 요즘 등)에 비해 ‘1년에 한 번 미만’으로 SNS를 통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높고, ‘매달 한 번 이상’ SNS 정책참여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낮아 SNS를 통한 정책참여가 오히려 더 활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와대나 일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미투데이나 요즘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정책참여의 기제로 많이 활용하고 있거나 이용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 이용자보다 공적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념성향에 따른 SNS 정책참여 빈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는

데 ‘1년에 한 번 미만’ 응답자의 경우 중도가 50.2%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보수가 41.6%, 진보가 33.1%의 순으로 나타나 정치적 무관심 및 불신증이 주류를 형성하는 중도층의 경우 정치 및 행정 기관에 대한 기관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정책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진보적 성향 응답자들의 참여 빈도가 저조한 이유는 제도정치권 밖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한 탓에 제도권내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오히려 적게 펼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선호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주요 정당 지지자들과 무당층의 경우, ‘1년에 한 번 미만’ SNS 정책참여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선진통일당, 진보신당, 기타 등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주요 정당들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응답자 그룹과 그렇지 못한 응답자 그룹 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표 3〉 SNS 활용 정책 참여 빈도의 교차분석 결과

(단위 : %)

		사례 수	1년에 한번 미만	6개월에 한 번 이상	2~3개월에 1번 이상	매달 한 번 이상
전체		(1000)	39.2	35.9	20.1	4.8
성별	남자	(534)	37.3	36.5	21.3	4.9
	여자	(466)	41.4	35.2	18.7	4.7
연령별	20대	(264)	47.7	31.4	16.7	4.2
	30대	(297)	39.4	37.4	19.5	3.7
	40대	(286)	33.6	39.9	21.0	5.6
	50대	(153)	34.6	33.3	25.5	6.5
지역별	서울	(212)	36.3	36.8	22.2	4.7
	경기/인천	(308)	39.6	37.0	18.2	5.2

	대전/충청	(99)	39.4	35.4	18.2	7.1
	광주/전라	(91)	36.3	35.2	24.2	4.4
	대구/경북	(99)	37.4	33.3	25.3	4.0
	부산/울산/경남	(154)	42.9	36.4	16.9	3.9
	강원/제주	(37)	48.6	29.7	18.9	2.7
SNS참여유형	데스크톱 SNS	(340)	41.2	36.5	19.1	3.2
	모바일 SNS	(660)	38.2	35.6	20.6	5.6
SNS 이용기기	데스크톱 PC	(717)	36.3	37.4	21.5	4.9
	노트북	(494)	36.0	38.5	20.9	4.7
	스마트폰	(850)	38.6	36.1	20.2	5.1
	태블릿PC	(168)	26.8	37.5	26.8	8.9
	스마트 플레이어	(35)	22.9	40.0	22.9	14.3
직업별	농림어업	(4)	50.0	50.0	0.0	0.0
	자영업	(84)	36.9	35.7	23.8	3.6
	블루칼라	(112)	33.0	30.4	30.4	6.3
	화이트칼라	(513)	38.0	39.4	17.7	4.9
	가정주부	(111)	42.3	35.1	18.9	3.6
	학생	(144)	44.4	29.9	20.1	5.6
	기타/무직	(32)	50.0	28.1	18.8	3.1
최종학력별	중졸이하	(6)	66.7	0.0	33.3	0.0
	고졸	(202)	50.5	27.7	17.8	4.0
	대재이상	(792)	36.1	38.3	20.6	5.1
소득별	200만원 미만	(137)	50.4	27.7	16.1	5.8
	200~300만원 미만	(175)	48.0	30.3	17.7	4.0
	300~400만원 미만	(165)	45.5	32.7	20.6	1.2
	400~500만원 미만	(215)	34.9	42.3	16.7	6.0
	500만원 이상	(308)	28.9	39.9	25.3	5.8
SNS이용기간	1년미만	(131)	55.0	26.7	13.7	4.6
	1~2년미만	(271)	45.0	35.4	15.1	4.4
	2~3년 미만	(255)	34.1	37.3	24.7	3.9

	3년 이상	(343)	32.4	38.8	23.0	5.8
SNS이용 유형	사교적유형	(245)	40.0	33.1	21.2	5.7
	관심유도형	(42)	38.1	35.7	21.4	4.8
	추종형	(134)	42.5	35.8	16.4	5.2
	관계재구축형	(83)	26.5	43.4	25.3	4.8
	실용형	(496)	40.1	36.1	19.6	4.2
정책참여 유형	의제설정	(412)	35.0	37.1	22.6	5.3
	정책결정	(248)	29.0	37.9	26.6	6.5
	정책집행	(136)	30.1	43.4	21.3	5.1
	정책평가	(408)	40.7	35.0	19.9	4.4
	기타	(4)	50.0	25.0	25.0	0.0
정책참여 SNS종류	페이스북	(493)	35.9	38.9	20.1	5.1
	트위터	(379)	30.1	40.6	23.2	6.1
	미투데이	(44)	11.4	45.5	29.5	13.6
	싸이월드	(117)	27.4	35.0	29.9	7.7
	커넥팅	(1)	0.0	100.0	0.0	0.0
	블로그	(187)	30.5	35.8	26.2	7.5
	요즘	(8)	12.5	12.5	37.5	37.5
	카카오톡	(245)	31.0	38.4	23.3	7.3
	유튜브	(62)	24.2	35.5	29.0	11.3
	기타	(2)	50.0	0.0	50.0	0.0
이념성향	보수	(185)	41.6	33.5	20.5	4.3
	중도	(265)	50.2	29.8	15.1	4.9
	진보	(550)	33.1	39.6	22.4	4.9
선호정당	새누리당	(214)	36.4	35.0	23.8	4.7
	민주통합당	(266)	34.2	39.8	20.7	5.3
	통합진보당	(43)	32.6	34.9	27.9	4.7
	선진통일당	(8)	25.0	37.5	37.5	0.0
	진보신당	(14)	28.6	42.9	28.6	0.0
	기타	(13)	23.1	53.8	15.4	7.7
	무당층	(442)	45.2	33.3	16.7	4.8

(3) 정책참여 관련 주요 명목/서열 변수 관련 카이제곱검정 결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설문자료 중 중요한 정책관련 명목 및 서열변수들에 대해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명목변수들 간에 독립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는 교차분석에 활용된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전체로 10개의 행변수와 7개의 열변수를 교차하여 카이제곱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는 <표 5>에 제시되고 있는데 스마트미디어 기기 활용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거주지역별로 서로 다른 빈도분포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스마트미디어가 삶에 미친 영향을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서울(3.93), 대전/충청(3.92), 대구/경북(3.92) 등의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광주/전라(3.51), 강원/제주(3.71)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는 교차분석의 결과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서울과 대전/충청 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도시화되어 있는 반면 광주/전라 및 강원/제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덜 도시화된 지역이란 점에서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 스마트미디어 기기의 활용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화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SNS의 이용기간 또한 카이제곱값이 16.54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는데 이는 SNS 이용기간과 스마트미디어 기기 활용에 따른 삶의 영향 간에 어느 정도의 연관적 관계가 존재함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 설문조사 데이터의 분석 결과, SNS 이용 기간이 많을수록 삶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SNS 이용기간과 이용용도가 SNS 정책참여의 빈도와 독립적이지 않으며, SNS 사용유형 또한 스마트미디어 활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활동에 대해 독립적이지 않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차분석의 결과는 모두 유의수준 0.01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또한 SNS 정책참여시 정책성격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 교차분석에 활용된 변수 설명

행변수				열변수			
문번	내용	범주	척도	문번	내용	범주	척도
SQ2	연령	4개	서열	B6	스마트미디어 삶 영향	2개	명목
SQ3	지역	2개	명목	B7	스마트미디어 활동 영향	2개	명목
SQ5	SNS 이용단말기	2개	명목	C2	SNS정책참여 빈도	2개	명목
A4-1	SNS 이용기간	2개	명목	C6	SNS정책참여시 정책성격	2개	명목
A7	SNS 이용용도	2개	명목	D12	모바일 적극응답이유	2개	명목
A8	SNS 사용유형	6개	명목	D14	공공기관 태도 기대감	2개	명목
D13	공공기관 반응 결과	2개	명목				
E2	정당지지	3개	명목				
DQ2	학력	2개	명목				

〈표 5〉 교차분석결과

	B6	B7	C2	C6	D12	D14
SQ2	2.17	5.173	7.36	4.588	4.544	5.457
SQ3	30.559*	14.294	17.659	13.077	17.444	13.115
SQ5	X	X	0.019	0.258	X	X
A4-1	16.546*	2.329	16.119**	4.627	7.707	5.51
A7	0.327	0.978	5.141**	0.785	0.623	0.327
A8	22.078	9.471**	2.879	9.946*	13.316	0.623
D13	0.298	0.185	2.162	0.035	0.036	2.552
E2	8.696	1.91	6.536	1.200	9.971	3.188
DQ2	5.52	2.418	3.335	13.763**	6.53	3.507

* p<0.05 ** p<0.01

4. 분석의 함의와 결론

앞선 본 연구의 경험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SNS 정책참여자들은 스마트미디어기기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정책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인식능력을 갖고 있으며, 비교적 활발하게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정책의제 가운데 사회적 정의나 형평과 관계되는 재분배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참여 경험자의 만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정책과정의 핵심단계라 할 수 있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정책참여 행위자로서 느끼는 정책효능감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견은 우리나라의 경우 SNS를 통한 정책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결정메커니즘의 관료제적 폐쇄성으로 인해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과 같은 전통적인 관료제의 작동영역에서는 시민의 정책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이론적 예측이나 일반적 인식과는 어느 정도 배치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SNS를 포함한 다양한 소셜미디어들의 정책과정에의 영향력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전체 정책결정과정의 동시적 개방, 즉 각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정책환류(policy feedback)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발견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본 연구의 빈도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를 물었을 때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꼽은 비율이 37.1%로 ‘스마트 미디어 기기’(32.0%)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역설적인 상황

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분석,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스마트미디어 기기의 영향력은 부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 응답자 집단이 지나치게 정책단계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정도가 높은 점이나 정책참여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효능감이 이전의 다른 연구들(이원태 외 2008 등)에서 확인된 바와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은 한편에서 스마트미디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책참여 효과로 바라볼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응답자 집단의 학습효과에 의한 편의(bias)가 작용한 부분이 없는지 냉정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단계별로 신속한 상호작용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50% 내외로 긍정평가가 많았던 점은 여전히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과정과는 꽤나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응답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이와 같은 의문점과 실증분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점에서는 스마트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SNS 정책참여의 뚜렷한 경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력별 분석에서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정책참여의 정도가 뚜렷하게 확인된 점은 SNS 정책참여에 있어서도 디지털 시대의 최대 사회문제라 할 수 있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 SNS, 스마트미디어의 이용 행태와 관련하여 20-30대를 중심으로 한 뚜렷한 연령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점이나⁵⁾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과 같은 정책과정

⁵⁾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고연령대가 저연령대에 비해 SNS 정책참여가 저조하다는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와 견주어 보아도 잘못된 주장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의 빈도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고연령대가 저연령대에 비해 SNS를 활용한 정책참여의 빈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의 핵심적인 단계에서 데스크톱 사용자에 비해 모바일 사용자의 참여 비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결과의 하나로 각인될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모바일 SNS 활용으로 증대된 이동성과 실시간성이 정책결정과 집행이라는 정책과정의 매우 중요한 단계로까지 시민참여를 끌어들이는 기술적 유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념성향에 따른 SNS 정책참여 빈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정치적 무관심 및 불신층이 주류를 형성하는 중도층의 경우 정치 및 행정 기관에 대한 기관신뢰의 부족으로 인해 정책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은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 응답자들의 참여 빈도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도정치권 밖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사회운동적 성격이 강한 탓에 제도권내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오히려 적게 펼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발견들은 향후 정부의 SNS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안철수 현상과 같이 기성 정치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을 제도 정치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보다 포용적인 온라인 참여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일부 진보세력들이 갖고 있는 SNS 정책참여에 대한 편견, 즉 제도화를 통한 길들이기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 버리도록 SNS 정책참여의 효능감을 제대로 느끼도록 도와주는 제도적인 차원의 배려 또한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부분이다.

(2014년 10월 7일 접수, 10월 29일 심사완료, 10월 30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권상희. 2011. “스마트폰의 진화와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4(2). 3-33.
- 권영동. 2010. “스마트폰 조기수용자 충족과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애플의 아이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희조. 2010.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자본: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연결적 vs. 결속적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5). 9~46.
- 금희조·조재호. 2010.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격차, 그리고 정치 참여: 소셜 미디어효과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5). 348~371.
- 김수현. 2010. “스마트폰에 대한 지각특성이 스마트폰 채택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9). 318-326.
- 김종호·김강민. 2004. “IT 활용을 통한 정책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13(3). 85-115.
- 김홍규·오세정. 2010. “아이폰 이용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주관성연구: Q방법론 및 이론』 20. 59-78.
- 김형지·김민성·오대규·김성태. 2014. “스마트폰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이용, 대인관계, 그리고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1). 163-196.
- 김혜진·김도연. 2011. “스마트폰 채택단계별 스마트폰 인식과 이용.” 『한국언론학보』. 55(4). 383-405.
- 김희연·오주현. 2011. “국내외 SNS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 24(12). 19-42.
- 박인근·신동희. 2010.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이용과 충족, 의존도, 수용자 혁신성이 스마트폰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0(4). 192-225.
- 박준수·서진완. 2008. “사이버공동체의 평가모형 및 방법: 정책참여 역량을 중

- 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3). 1-30.
-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1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a. “2012년 상반기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b. “2011년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0a.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II).”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0b.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이용자의 SNS이용실태조사.”
- 손승혜·최윤정·황하성. 2011.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한 초기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채택행동 연구.” 『한국언론학보』. 55(2). 228-251.
- 서진완·박준수. 2010. “사이버공동체의 정책참여와 정부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3(2). 107-128.
- 심미선·김은미. 2011.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방송통신위원회.
- 심홍진·황유선. 2010. “마이크로블로깅(micro-blogging)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트위터(twitter)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2). 192~234.
- 양일영·이수영. 2011. “이용 동기에 기반한 스마트폰 초기 이용자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5(1). 109-139.
- 유석진·이현우·이원태. 2005.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과 정치참여: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 집단의 매체이용과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3). 141-169.
- 윤상오·이유탉. 2011. “공공사이트와 민간사이트간 온라인 정책참여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4(4). 111-143.
- 윤성이. 2006. “정책과정에서 온라인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사회이론』. 가을·겨울. 187-211.
- 이용일. 2010. “스마트폰 유통에 따른 대학생의 기술 수용의도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13(5). 93-111.
- 이원태·차재권·홍순식. 2008. “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재성. 2006. “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 임광현. 2008.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2(2). 286-316.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1. “2011 소프트웨어 산업 연간보고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임준형. 2006.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3). 53-76.
- 임희경·안주아. 2014. “소셜미디어 이용형태 및 소셜 디바이드 현황 분석: 소셜 미디어 접근과 이용 격차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2). 143-164.
- 정연정. 2004. “영리한 군중(Smart Mobs)의 등장과 디지털 정치참여.” 『국제정치논총』. 44(2). 237-258.
- 조화순·송경재. 2004.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정책 참여: 단일 이슈네트워크의 정책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 197-214.
- 조희정. 2011. “전자정부 시민참여 서비스의 전환과 정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쟁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활용 현황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33. 72-109.
- 차재권·장우영. 2010. “융합환경에서 정책결정과정의 변화와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영·박성현. 2011. “소셜 미디어 이용동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2). 241~276.
- 하중원. 2006. “대학생의 인터넷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2. 369-405.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화진흥원.
- 황성수. 2011. “전자거버넌스와 정책의제 설정: 전자정부사이트에서의 정책제안과 시민참여 탐색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2). 1-21.
- 황주성·이재현. 2011. “스마트폰과 일반폰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패턴 비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보』. 28(4). 303-350.
- 황주성·이재현·이나경. 2010. “모바일 인터넷으로 인한 미디어 이용패턴의 변

- 화: 스마트폰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황하성·손승혜·최윤정. 2011. “이용자 속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5(2). 277-313.
- Barber, B. 1999.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Technology and Strong Democracy.” *Political Studies Quarterly*. 113. 573-590.
- Bonchek, M. S. 1997. “From Broadcast to Netcast: The Internet and the Flow of Political Informa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Browning, G. 1996. *Electronic Democracy: Using the Internet to Influence American Politics*. Wilton, CT. Pemberton.
- Chadwick, A. 2008. “Web2.0: New Challenges for the Study of E-Democracy in an Era of Informational Exuberance.” *A Journal of Law and Policy for the Information Society*. 4(3).
- Faria, C. F. 2010. “Can People Help Legislators To Make Better Laws?: The Brazilian Parliaments e-Democracia.”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ory and Practice of Electronic Governance.
- Gigler, Björn-Sören. 2011. “Decentralization, Clientelism and Popular Participation: Is there a role for ICTs to improve local governance?.”
- Gonzales, A. L., & Hancock, J. T. 2011. “Mirror, Mirror on my Facebook Wall: Effects of Exposure to Facebook on Self-Esteem.”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1-2). 79~83.
- Heeks, R.(ed.). 1999. *Reinventing Government in the Information Age: International practice in IT-enabled public sector reform*. New York. Routledge
- Hu, Jinrong. 2011. “On Virtual Public Sphere and Network Citizen Participation.” IEEE Computer Society Working Paper.
- Java, A., Song, X., Finin, T., & Tseng, B. 2007. “Why we twitter: understanding microblogging usage and communities.”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9th WebKDD and 1st SNA-KDD 2007 workshop on Web mining and

- social network analysis, San Jose, California.
- Jonson, A. N. 2008. "Looking at, looking up or keeping up with people?: motives and use of facebook."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 of the twenty-sixth annual SIGCHI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Florence, Italy.
- Kakabadse, L. et al. 2003. "Reinventing the Democratic Governance Project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A Growing Agenda for Debat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anuary/February.
- Kardara et. al. 2011. "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Enabling Policy Simulation in Virtual Spaces." Presented at the 2011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ames and Virtual Worlds for Serious Applications.
- Karlon, A. K., et al. 2009. "Working Overtime: Patterns of Smartphone and PC Usage in the Day of an Information Worker."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5538. 398~405.
- Laanpere·Tammsaar·Sausa. 2011. "A Case Study on Using Social Media for e-Participation Design of Initiative Mapper Web Service." Presented at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ory and Practice of Electronic Governance. 290-292.
- Lampe, C., Ellison, N., & Steinfield, C. 2006. "A face(book) in the crowd: social Searching vs. social browsing."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6 20th anniversary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Banff, Alberta, Canada.
- Lampe, C., Ellison, N. B., & Steinfield, C. 2008. "Changes in use and perception of facebook."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8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San Diego, CA.
- Livingstone, S. 2008. "Taking risky opportunities in youthful content creation: teenager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intimacy, privacy and self-expression." *New Media & Society*. 10(3). 393~411.

- Luo, Guifa. 2011. "The Research on Government Decision-Making Mechanism Shift under E-government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2011 IEEE.
- Matthews, T., & Pierce, J. 2009. *No Smart Phone Is an Island: The Impact of Places, Situations and Other Devices on Smart Phone Use*. IBM.
- Matheus et al. 2010. "Case Studies of Digital Participatory Budgeting in Latin America: Models for Citizen Engagement."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ory and Practice of Electronic Governance.
-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4). 357-364.
- Oakley, K. 2002. "What is e-governance?." presented at the e-Governance Workshop of the Council of Europe.
- OECD. 2001.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 OECD. 2003. *Promise and Problems of E-Democracy: Challenges of Online Citizen Engagement*.
- Pascu, C. 2009. "The Adoption and Use of Social Computing. In The Impact of Social Computing on the EU Information Society and Economy." Punie et al. eds. Seville, Spain: 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 33-42.
- Peristeras et al. 2009. "Transforming E-government and E-participation through IT." *IEEE Intelligent Systems* (2009 September/October). 14-19.
- Priolli et al. 2010. "Cyberinfrastructure for Social Action on National Priorities." *IEEE Computer Society*(2010 November).
- Rheingold, H. 1993. *The Virtual-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Reading, MA: Addison-Wesley.
- Rheingold, H. 2002. *Smart Mob*.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 Rheingold, Howard. 2002. *Smart Mobs*. 하워드 라인골드 (저) 이운경 (역). (2003). 『참여군중』 서울: 황금가지.
- Riley, C. G. 2003. "The Changing Role of the Citizen in the e-Governance and

- e-Democracy Equation.”
- Rose, R. 2002. *The Internet's Impact on East Asian Governance: Openness, Imperial Rules and Accountability*. Glasgow.
- Sardi, X.C. & K. Mlikota. 2002. “Overview on E-governance.” Prepared in the Framework of the ICT Cross-Cutting Project for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Stanley, W. J., & Christopher Weare. 2004. “The Effects of Internet Use on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An Agency Online Discussion Forum.” *Administration & Society*. 36(5). 503-527.
- United Nations. 2005. *Global E-government Readiness Report 2005: From E-Government to E-Inclusion*. New York: United Nations.
- Urista, M. A., Dong, Q., & Day, K. D. 2009. “Explaining why young adults use MySpace and Facebook through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 *Human Communication*. 12(2). 215~229.
- Zhang, He. 2011. “Internet-mediated Participation in Public Policy Setting and Its Effect.” IEEE Working Paper.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hrough SNS:
A Comparison of Effectiveness in Policy Participation between
Desktop and Smart Media Users

Won-tae Lee · Jae-kwon Cha

This paper has a main research interest on the question of how effectively smart media including smart phone can influenc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compared to desktop or notebook users. Therefore it focuses on verifying whether the proliferation of smart media usage not only has an impact on the increase of citizen's policy participation, but also brings some fundamental changes in the patterns of on-line policy participation by moving participator's focus from some specific policy process such as agenda-setting and policy evaluation to the entire policy process.

To do so, this paper challenges to make an empirical test of some substantive impact of smart media usage on the patterns of SNS usage and policy participation by utilizing some basic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frequency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then offers some policy solu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SNS-based policy participation in the era of smart media and digital convergence.

The research outcome shows that Korean SNS-based policy participators have a higher level of awareness for the entire policy process regardless of their use of smart media appliances and thu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In particular, they are highly interested some specific issues including social justice or equity associated with the area of redistributive policy. In addition, policy participators most strongly perceive their policy efficac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rather than in any other policy process.

Key Words: Social Network Service, smart media, policy participation, policy process, on-line policy participation